

‘노동안전 종합 대책’ 압박에 지역 건설업계 ‘우려’

중대재해 뎀 과징금 폭탄·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재발시 등록말소 등
건설경기 악화에 줄폐업 우려…“노동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병행돼야”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새로운 노동 관련 대책이 지역 건설업계에 긴장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뿌리 뽑겠다며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역건설현장에서선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미분양 등으로 체질이 허약해진 지역 건설업체의 줄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의 정부 지원책 마련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다.

우선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금에 재투자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기존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영업정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사유에 포함된다. 영업정지 기간 역시 사망자 수에 비례해 현행 2~6개월에서 더 늘어났다

‘잠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건설사가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사실상 ‘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대출·보증 등 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강경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망 사고와 여전히 높은 산재 사망률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2023년 기준 0.39로 같은 기간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추락·끼임 같은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과징금과 영업정지 강화가 중소 건설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지역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현장 안전문화 정착보다는 단기적인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5%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한 건설 현장 수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불법하도급 제재

- 불법하도급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기준 현행 ‘5년 내 3회 이상’에서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해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현행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예방 위한 제재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 요건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
-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6개월인 영업정지 기간 강화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건 사유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

연말업뉴스

자료: 고용노동부

업계는 제재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결국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라며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해도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노동자 인식 개선 캠페인, 체험형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전국 워크숍

제도 교육·사례 공유 등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87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전국 지자체 워크숍’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리 지역 제도 활성화,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진행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 165명은 소규모주택정비제도와 사업성 분석,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과 국비 지원 가이드라인, 관리 지역 내 기반 시설 공급 계획 수립 등 강좌별 교육을 수강했다. 기반 시설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통한 기반 시설 설치 사례를 듣고 각 지자체에 맞는 관리 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규모 정비 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노후·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리 지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에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무원 대상 교육·워크숍 지원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초기 사업성 분석, 사업 대상 요건 분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6·27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거래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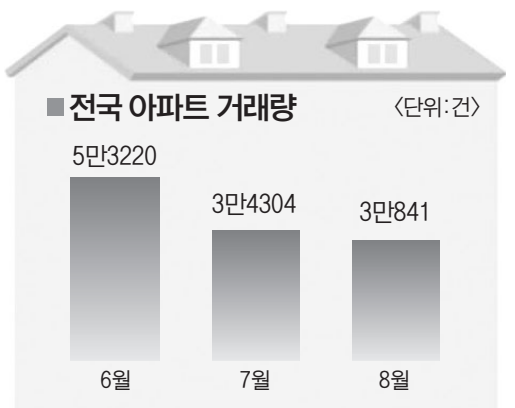
직방 발표…수도권 거래 ‘반토막’

6·27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조사가 나왔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거래량은 6월 5만 3220건에서 7월 3만 4304건, 8월 3만 841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3만 1132건, 1만 4331건, 1만 2982건으로 절반 이상 거래량이 줄고 거래 가격 변동 폭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의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은 여전히 1% 내외 상승세를 유지하며 수도권 내에서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격 변동률은 6월 전국 평균 거래 가격 변동률은 0.94%, 수도권은 1.1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7월과 8월에는 전국 변동률이 각각 0.66%, 0.67%로 둔화했고 수도권은 0.70%, 0.57%까지 변동 폭이 축소됐다.



반면 수도권 외 지방은 같은 기간 0.62%→0.63%→0.74%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직방은 지방이 6·27 대책에서 벗어나 거래량 감소 폭이 제한적이고 가격 흐름도 유지된 결과로 분석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급감과 가격 양극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토부, 등기부등본 열람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날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주택사업 경기 전망 3개월째 하락

주택산업연구원 발표…광주 7월 88.8서 9월 66.6 추락

광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수 역시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인 침체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발표한 9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 지수는 전월보다 14.6%p 떨어진 66.6으로 전망됐다. 7월 88.8, 8월 81.2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의 9월 지수는 66.6으로 전월보다 3.0%p 올랐지만, 7월 전망(71.4)과 전년 동월(68.7)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16.8%p 상승해 83.4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평균 4.8%p 줄어 73.2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7월 이후 비수도권 지수는 대출 규제 시행 직전까지 회복 기세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 반등하지 못한 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에 주택 가격 반등 동력이 부족한 데다 수요 부진과 미분양 물량이 집

중되면서 구조적 침체가 장기화됐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지수 회복세에 대해 서울 핵심 입지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면서 사업자들이 주택 사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봤다.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6·27 대책으로 7월에는 상승 흐름이 잠시 주춤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탄력을 받아 회복세를 되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하남·광명·안양시 등이 동반 상승하며 수도권 전반의 호조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과 인허가·착공·분양 등이 감소해 공급 전반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약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 완화, 미분양 우려 사업장의 임대 전환형 프로토타입이낸싱(PF) 보증 신설 등 정책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설 경기의 구조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